

공동 학술대회

지방지 편찬과 지방역사

목포시사편찬위원회 · 목포대학교 사학과

목포시사 편찬을 위한 5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지방지 편찬과 지방역사

2016년 6월 10일(금) 10:00 ~ 17:30

목포대학교 70주년기념관 컨퍼런스룸

주최 | 호남사학회, 대구사학회, 도시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호서사학회

주관 | 목포시사편찬위원회 · 목포대학교 사학과

후원 | 목포시 · 한국연구재단 · 목포대학교

[5개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지방지 편찬과 지방 역사

- 일시 : 6월 10일(금) 10:00 ~ 17:30
- 장소 : 목포대학교 70주년기념관 컨퍼런스룸

- 주최 : 호남사학회, 대구사학회, 도시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호서사학회
- 주관 : 목포시사편찬위원회 · 목포대학교 사학과
- 후원 : 목포시 · 한국연구재단 · 목포대학교

[학술대회 일정]

<개회식> (10:00~10:30)

/ 사회(나선하, 목포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국민의례

개 회 사 : 고석규(호남사학회 회장, 목포대)

인 사 말 : 박홍률(목포시장)

최 일(목포대 총장)

<기조강연> 10:30~10:45, 퍼블릭 히스토리로서의 지역사와 도시사 / 발표 : 민유기(경희대)

제1부 발표

/ 사회(김덕진, 광주교대)

10:45~11:15, 고려 중·후기 別墅의 운영과 도시근교농업의 발달

발표 : 정용범(부산대) / 토론 : 한정훈(목포대)

11:15~11:45, 선산 읍지 『일선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발표 : 박인호(금오공대) / 토론 : 김경숙(조선대)

11:45~12:15, 임란 이후 순천지역 사족의 변화와 『승평지』 편찬

발표 : 이욱(순천대) / 토론 : 이재두(경북대)

12:15~13:15, 점심

제2부 발표

/ 사회(송한용, 전남대)

13:15~13:45, 일제 하 지방사 편찬에 나타난 지방 '통사'의 서술

발표 : 정상우(한림대) / 토론 : 류시현(광주교대)

13:45~14:15, 청말 호남성의 교경서원(校經書院)

발표 : 이영란(조선대) / 토론 : 최은진(국민대)

14:15~14:45, 戰後 上海의 韓僑 처리와 한인사회

발표 : 김승욱(충북대) / 토론 : 유연실(전남대)

14:45~15:15, 일본인의 지방 지식과 제국주의 담론 -에미 스이인의 『실지탐험 포경선』 분석-

발표 : 허영란(울산대) / 토론 : 노경덕(광주과기원)

15:15~15:30, 중간 휴식

제3부 발표

/ 사회(김성준, 목포 해양대)

15:30~16:00, 일본 전후사학과 『오кина와현사(沖縄県史)』·『나하시사(那覇市史)』 편찬의 역설:
국민사에서 탈국민사로

발표 : 김민환(한신대) / 토론 : 임종명(전남대)

16:00~16:30, 로마제국 통치 하의 속주의 로마화와 엘리트층의 관계

발표 : 김상엽(단국대) / 토론 : 김영목(목포대)

16:30~17:00, 독일 전후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Land) 형성을
통해 본 지역통합

발표 : 김건우(경북대) / 토론 : 최영태(전남대)

17:00~17:30, 종합토론

/ 좌장 : 고석규(호남사학회 회장, 목포대)

[목 차]

<기조강연> 퍼블릭 히스토리로서의 지역사와 도시사 발표 : 민유기(경희대)	1
--	---

[제1부]

1주제 : 고려 중·후기 別墅의 운영과 도시근교농업의 발달 발표 : 정용범(부산대)	11
토론 : 한정훈(목포대)	30
2주제 : 선산 읍지 『일선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발표 : 박인호(금오공대)	33
토론 : 김경숙(조선대)	59
3주제 : 임란 이후 순천지역 사족의 변화와 『승평지』 편찬 발표 : 이 욱(순천대)	61
토론 : 이재두(경북대)	76

[제2부]

1주제 : 일제 하 지방사 편찬에 나타난 지방 '통사'의 서술 발표 : 정상우(한림대)	79
토론 : 류시현(광주교대)	91
2주제 : 청말 호남성의 교경서원(校經書院) 발표 : 이영란(조선대)	93
토론 : 최은진(국민대)	108
3주제 : 戰後 上海의 韓僑 처리와 한인사회 발표 : 김승욱(충북대)	111
토론 : 유연실(전남대)	130
4주제 : 일본인의 지방 지식과 제국주의 담론 -에미 스이인의 『실지탐험 포경선』 분석- 발표 : 허영란(울산대)	135
토론 : 노경덕(광주과기원)	145

[제3부]

1주제 : 일본 전후사학과 『오키나와현사(沖縄県史)』·『나하시사(那覇市史)』 편찬의 역
설: 국민사에서 탈국민사로

발표 : 김민환(한신대) 147

토론 : 임종명(전남대) 160

2주제 : 로마제국 통치 하의 속주의 로마화와 엘리트층의 관계

발표 : 김상엽(단국대) 163

토론 : 김영목(목포대) 173

3주제 : 독일 전후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Land) 형성을 통해
본 지역통합

발표 : 김건우(경북대) 175

토론 : 최영태(전남대) 180

퍼블릭 히스토리로서의 지역사와 도시사*

민유기(경희대)

1. 글로벌 시대 지역사와 도시사의 중요성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는 슬로건처럼 세계화는 삶의 구체적 현장에서의 작은 변화들을 야기하는 일상의 실천을 중시한다. 세계화는 삶의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와 재영역화(reterritorialization)라는 상보적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30년전쟁을 종결시킨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 영토, 주권, 국민을 기반으로 등장한 국민국가들은 세계화 시대에 삶의 규모 조정(rescaling), 시민권의 재영역화와 지향 조정(reorientation)이라는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¹⁾ 규모 조정이란 국민국가 위주의 삶의 단위가 초국가 범위로 확대되는 동시에 국가 내 지역이나 도시 단위로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뿐 아니라 도시민, 지역민, 혹은 유럽의 경우 유럽시민 같은 다양한 시민권 형태가 출현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단일한 정체성이나 귀속의식 못지않게 도시민, 지역민, 트랜스내셔널지역민 등 다양한 소속감과 자부심 및 정체성에 대한 지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도시나 지역은 규모가 작지만 일상이 펼쳐지는 실제적 삶의 공간이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다. 하지만 19세기 이래 근대국가의 형성 성장 발달 과정에서 도시나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에서 기인하는 정체성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민족문화와 국민국가의 역사(민족사)를 강조하다보니 지역이나 도시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은 지역색이나 지역감정에 악용될 위험성 때문에 폄하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성장이라는 내부적 역사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흐름이라는 외부적 역사환경의 변화 속에서 도시나 지역의 역사문화 전통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속감과 정체성을 강화시켜주며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 중시되며 재평가되고 있다.

공간은 인간의 활용에 의해 장소가 된다. 인간과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서, 즉 인간의 공간적 활용과 체험에 의해서 특정 공간에 대한 일정한 ‘장소감(sense of place)’이 형성되고, 이는 특정 ‘장소에 대한 애착(topophilia)’과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한다.²⁾ 영국의 예

* 2016년 6월 호남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대구사학회, 호서사학회, 도시사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기조 발표문으로 퍼블릭 히스토리의 개념과 방법론, 각국의 현황 등 많은 보완을 거쳐 완성된 논문으로 학술지에 게재되기 전까지 가급적 인용을 삼가 줄 것을 희망한다.

1) M. Purcell, "Citizenship and the right to the global city: reimagining the capitalist world 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27, no.3, 2003, pp.571-576.

2) Yi-Fu Tuan,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7; 이-푸 투안, 구동회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1999. Yi-Fu Tuan,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s, Attitudes, and Values*, New York, 1990.

드워드 렐프(Edward C. Relph)는 이미 1970년대 중반에 특별한 소속감을 주지 못하는 현대 도시공간의 획일성을 ‘장소상실(placelessness)’이란 개념으로 분석한 바 있다.³⁾ 이와 비슷하게 프랑스의 인류학자 마르크 오제(Marc Augé)는 ‘비장소(non-lieu)’이란 개념으로 현대사회의 유동적이고 일시적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공간을 분석한다. 고속도로, 공항, 쇼핑몰, 공원, 호텔, 레저타운 등의 장소들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지 못한 채 특정한 목적을 위한 개인적 이동의 관계 속에서만 등장하는 비장소이다. 그는 단순히 오가는 장소에 불과한 비장소와 대별되는 ‘인류학적/인간학적 장소(anthropological place)’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이 장소는 언어, 역사, 지역적 특성, 생활방식에 기반을 둔 개개인의 명확한 정체성에 의해 형성되며 인간 삶의 유기적 결속에 기여한다.⁴⁾

역사학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면, 역사학이 시간의 흐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두었던 공간적 차원을 중시해야만 할 것이다. 역사는 과거의 모든 것이 아니며 과거로부터 남겨진 모든 것도 아니다.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면 우리가 과거에서 역사를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재적 인식의 기초 위에서만 존재가능하다. 글로컬의 시대 흐름은 지금껏 역사학 연구의 중심점이었던 국민국가의 역사(민족사)에서 지역이나 도시공간에 대한 보다 확대된 역사 연구, 교육, 실천을 요구한다.

포스트모던이 모던을 넘어서고자 하는 이성 역시 모던의 산물이기에 모던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것이지 중세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글로컬 시대 지역사와 도시사에 관한 학문적 사회적 요구는 국민국가 등장 이전 전근대적 봉건적 단위로서의 지역이나 특정 공간 자체에 대한 폐쇄적 역사인식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도시에서의 역사가 민족사, 세계사 등 다양한 층위의 역사환경과 조우하는 ‘교차사(histoire croisée)’로서 개방적 역사인식에 기초한다.⁵⁾ 즉 지역사나 도시사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미시사적 접근과 거시사적 접근이 교차하는 역사 지식을 생산하며서 학문적 차원에서 역사학의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 지역사나 도시사는 지역민이나 도시민의 일상생활 공간 속에 축적된 다양한 역사의 흔적들에 대한 공공의 다양한 수요와 결합하는 퍼블릭 히스토리를 통해 시민역사교육의 확대에, 역사문화관광산업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5. 나오며: 한국의 퍼블릭 히스토리를 위하여

최근 서울시는 ‘2천년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역사도시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이 존재하고 역사문화환경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 조

3) Edward C.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1976: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4) Marc Augé, *Non-Lieux. Introduction à une anthropologie de la surmodernité*, Paris, Seuil, 1992.

5) Michael Werner, Bénédicte Zimmermann (dir.), *De la comparaison à l'histoire croisée*, Paris, Seuil, 2004.

화롭게 연계되는 도시”로 개념정의 되었다. 또한 역사도시의 주요 특성으로 다양한 시대의 역사문화유산 존재,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사문화유산의 향유, 새로운 역사문화자원의 개발·촉진, 역사문화환경의 지속가능성, 도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과 연계·활용이 제시되었다. 이 기본계획에는 폭넓은 역사 연구와 교육지원, 역사문화 전공자들을 위한 공공 일자리창출, 시민참여를 통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콘텐츠화 등의 향후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다. 퍼블릭 히스토리의 발전을 가져 올 이와 유사한 계획이나 정책이 여러 지자체에 확산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계획의 내용들이 충실하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현되는지 감시하고 참여하고 한다.

역사도시 기본계획은 역사와 문화를 상품화하는 개발주의적 시각 보다는 시민의 정체성 강화와 시민의 일상적 삶이 전개되는 역사환경의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 시각을 우선시한다. 도시는 시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활동이 상호관계를 맺으며 진화해 나가는 역사적 유기체이다. 도시는 건축물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세대 간에 이어받고 계승하는 삶의 터전이다. 시민들에게 자신이 만들어가는 도시 공간에서 자신들 보다 앞선 세대들이 남겨놓은 역사문화의 향기와 숨결을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도시 역사환경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재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선행된다면, 도시의 역사성과 고유한 정통성을 체험하는 문화관광산업도 자연스럽게 발전 가능할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무수한 사실들은 현재 제기되는 여러 질문들에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즉 현재의 문제의식 속에서 역사 연구자들에게 파헤쳐진다.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각종 현안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의 입안 또는 문제해소 방안을 위한 이론적 경험적 근거와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과거의 거울에 오늘을 비추고 내일을 설계하기 위해 역사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역사 연구의 결과가 지니는 유용성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역사 연구자들이 퍼블릭 히스토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적어도 대중이 역사를 과거를 직접 대면하는 장소들인 역사유적지나 박물관의 전시 설명에서 더 이상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들은 정확한 역사정보들로 정정되어야 한다.

지역사나 도시사의 주된 연구 영역이나 주제들은 해당 지역이나 도시에 대한 대중의 다양한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기에, 한국의 퍼블릭 히스토리의 앞날은 지역사나 도시사 연구자들의 활동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국의 퍼블릭 히스토리의 발전을 위해 (중앙이나 지방) 정부는 역사지식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역사연구와 서술, 시민역사교육을 지원하고, 역사 연구자들은 (중앙이나 지방) 정부의 문화정책이나 박물관 정책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고려 중·후기 別墅의 운영과 도시근교농업의 발달

정용범(부산대)

머리말

1. 고려 중·후기 別墅의 운영
 - 1) 경기지역의 별서
 - 2) 지방의 별서
 2. 별서와 도시근교농업
 - 1) 별서의 근교농업
 - 2) 근교농업과 도시의 유통경제
- 맺음말

머리말

고려전기까지 국가의 강한 통제 관리 아래 있던 유통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12세기를 전후한 시점이었다. 특히 무신집권기를 전후한 시점 관리들의 불법행위는 국가의 유통경제 통제를 어렵게 만들었으나 한편으로는 고려전기부터 제한된 형태나마 전개되던 지배층의 사적 유통영역을 크게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¹⁾ 사적 유통영역이 활성화된 것은 문종대를 전후하여 인구의 도시로의 유입에 따른 도시 규모의 확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유통망의 정비 등이 그 배경이 되었다.²⁾ 이러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유통경제의 활성화는 고위 관료를 비롯한 지배층의 別墅, 草堂, 동산의 경영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무신집권기에는 유통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교통로상의 요지에는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서고 확대되어 갔다. 원래는 황무지였던 곳에 교통로가 개발되면서 자신의 別墅를 세우는 고위관료도 있었고, 교통의 요충지에 院을 조영하는 관리나 지방의 향리도 있었다. 새로운 교통 편의시설 주변에는 그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거주도 확대되고, 유통망의 정비에 따라 다양한 물자들이 도시로 집결되어 시전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공급되었다.

본고에서는 도시근교농업의 발달을 별서의 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별서의 운영과 그 입지적 조건을 확인함으로써 고려후기 유통경제의 발달에 발맞추어 별서가 도시의 근교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였음을 확인한다. 둘째 도시근교농

1) 정용범, 「고려 전·중기 유통경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 정은정, 「고려중기 경기지역의 공한지 개발」 『지역과 역사』 16, 2005.

업으로서의 별서의 운영 실태를 재배된 품종과 도시에서의 판매를 중심으로 확인함으로써 고려후기 별서의 중요한 경제적 활동 중 하나가 도시근교농업이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도시근교농업은 12세기 이후 서울과 지방에서 유통경제가 발달하고 있던 구체적 모습의 하나였음을 살펴본다.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한다. 최근에 들어와서 주목되고 있는 別墅는 휴양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이나 입지적 조건, 경제적 측면 등이 밝혀졌다. 본고는 이중 도시의 발달에 따라서 별서에 근교농업의 양상이 있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달리 말하면 고려 중·후기 유통경제 발달의 한 측면을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12세기 이후 관료들의 별서는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지방사회로까지 확산되었다. 관료들의 별서 조영은 단순히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서도 변화를 가져와서 ‘別莊’ 기능뿐만 아니라 거주 및 생활의 주된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경제적 기능이 중요해졌다.

둘째, 별서는 주로 개경과 지방 邑治의 교외에 조성되었다. 경기지역 별서들은 경치, 교통, 생산의 측면들을 고려하여 조영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공간적 규모에서 보면 자가소비 내지 도시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 다품종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고려후기 관료들의 낙향이 늘어나는 추세와 더불어 별서의 조영 역시 크게 늘어났다. 낙향 관료들의 일부는 별서를 두었고,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확대되어 사대부나 향리층 일부도 별서를 조영하였다. 이들 지방의 별서들은 토지와 같은 생산기반의 확보가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넷째, 송대 도시의 채소 소비 수요에 따라 근교는 전문화가 나타나 도시에 채소를 공급하는 생산지로 대두하였는데, 고려의 경우도 교외의 별서를 중심으로 근교농업이 나타났다. 관료들의 별서에는 채소뿐만 아니라 과일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들이 재배되고 있었다. 이들 작물들은 자가소비 외에 일부는 도시민들에게 판매되었다.

다섯째, 별서에서는 몇 가지의 작물을 동시에 재배하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작물의 전업화 내지 품종의 개량이 있었다. 이는 발달하던 유통경제에 편승한 것이었다.

여섯째, 고려후기 개경의 京市에는 시전 이외 민간 소유 상설점포들이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도시의 발달에 따른 인구의 증가 소비 수요의 증대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도시화 속에 별서를 중심으로 한 도시근교농업도 활성화되어갔다.

본고는 별서의 근교농업 경영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지만 지방 도시의 발달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지방 도시와 별서에 대해서는 후고로 남겨두고자 한다.

선산 읍지 『일선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박인호(금오공대)

1. 머리말
2. 『일선지』의 편찬
 - 1) 편찬자 최현
 - 2) 『일선지』의 편찬과 후보
 - 3) 『일선지』의 체재 비교
3. 『일선지』에 나타난 편찬정신
 - 1) 편찬 동기
 - 2) 『일선지』의 내용
 - 3) 편찬의 의미
4. 맺음말

1. 머리말

선산의 사찬 읍지인 『일선지』는 최현에 의해 편찬되었다. 『일선지』는 이후 동일한 제명으로 몇 차례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기본적인 형태는 최현이 만든 『일선지』에서 이미 마련되었다. 선산에 대한 관찬 읍지가 지속적으로 편찬되었으나 내용 면에서 『일선지』의 풍부함에 미치지 못한다. 최현의 『일선지』는 이후 선산에서의 편찬된 지리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¹⁾ 따라서 최현의 『일선지』의 대한 분석은 전통시대 선산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일선지』에 대한 서지학적 접근으로 각 도서관에 소장된 『일선지』의 체재와 내용 비교를 통해 변화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혼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선지』의 저자 문제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각 도서관에서 단편적으로 진행된 해제 작업에서는 『일선지』의 저자로 최현, 이준, 혹은 최현과 이준의 공동 편찬 등으로 서술되어 있다. 『일선지』의 편찬 양상을 통해 편찬자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덧붙여 후대에 수정된 『일선지』의 수정 양상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최현이 어떠한 문제의식에서 선산에 대한 사찬 읍지인 『일선지』를 편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선지』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당시 선산 사회의 위상과 동시에 변모되어 가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덧붙여 수정본의 보충된 내용

1) 선산 관련 관·사찬 지리지의 편찬 양상에 대해서는 박인호, 「지리서를 통해 본 전통시대 선산 사회의 변화」, 『조선사연구』 23, 조선사연구회, 2014 참조.

을 통해 『일선지』의 수정이 가지는 의미도 살펴보고 한다.

4. 맺음말

이 논문은 최현이 편찬한 선산의 사찬 읍지인 『일선지』의 편찬과 편찬정신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일선지의 작자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일부 해제에서는 이준의 <題一善人物誌後>와 <題崔季昇所撰琴生傳後>가 수록되어 있는 점을 들어 막연하게 崔暉과 李峻의 공저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준의 <제일선지리지후>는 선현 항목, <제최계승소찬금생전후>는 <금생이문록>에 대한 각각의 발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체 글에 대한 발문으로 보기 어렵다. 최현과 이준의 교유 관계와 작성 시기로 보아 1618년 최초 편찬된 『일선지』에 보충이 이루어지면서 이준의 발문들이 최현에 의해 추보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현이 편찬한 『일선지』는 네 종류가 남아 있는데 특히 후손가 소장의 『일선지』는 최현이 최초로 만든 것을 보충한 것으로, 그 보충 시기는 1630년대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은 초기에 만든 『일선지』 지리 부분 일부와 제영 부분이 별도로 남은 것이다. 장서각본과 규장각본 『일선지』는 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데, 장서각본은 완본이다. 이 책들의 추보 시기는 고종대까지 내려온다. 『일선지』의 체재와 항목은 관찬의 정형화된 체재와는 다르며 대주제와 세부적인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직전에 만들어진 이준의 『商山誌』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일선지』를 편찬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금생이문록>의 망실과 초고 회수 과정에서 건재 박수일로부터 鄉賢의 사적이 날로 어두워지므로 ‘일선지’를 편찬하라는 권유가 있었으며, 서원의 향현 추송과 관련하여 먼저 향현의 행적을 파악해야 한다는 정구의 요청이 있었다. 향현의 행적 파악과 추송을 위한 자료 수집에서 출발하여 읍지로 정리된 것이 『일선지』라고 할 수 있다.

『일선지』에서 보인 당대 선산 사회를 다룬 정확성이나 거주 중심의 인물 기재 등의 내용은 사찬의 전국지리지인 유형원의 『동국여지』에서도 주목되었다. 『일선지』는 임진왜란 직후에 편찬되면서 임란 이후의 선산 사회의 변화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내용 중에서는 임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기술이 각 항목에 다양하게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일선지』는 17세기 초반까지의 선산 사회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보고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후 편찬된 선산에 대한 지리서의 기본 정보원이 되었다.

임란 이후 순천지역 사족의 변화와 『승평지』 편찬

이육(순천대)

I. 머리말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지리지가 편찬되었다. 15세기에는 국가 주도하의 전국지리지의 편찬되었던 반면, 16세기 들어서는 수령과 지역 사족이 주도한 군현단위의 읍지가 편찬되었다. 지리지 편찬 주체와 형태에서 보이는 이러한 변화는 조선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조선초기에 편찬되었던 전국지리지는 국가 통치를 위한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 강했다.¹⁾ 그렇지만 『신찬팔도지리지』→『경상도지리지』→『세종실록』 지리지 계통의 세종대 지리지와 『팔도지리지』→『경상도속찬지리지』→『동국여지승람』으로 이어진 성종대 지리지들은 책의 성격이 달랐다. 즉 세종대 지리지가 호구, 전결, 군정, 토의, 공물 등 경제·군사·행정적 측면이 상세한 지리지였음에 반해, 『동국여지승람』으로 대표되는 성종대 지리지는 인물·禮俗·詩文 등에 치중한, 문화적 성격이 강한 지리지였다.²⁾ 이는 세종대와 성종대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세종대 이후 토지 공법 체계의 문란과 名族意識의 형성과 대내적인 변화,³⁾ 그리고 중국에 대한 조공관계에서 오는 현실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외적인 상황 변화가 작용하였다.⁴⁾ 이 때문에 문화적인 내용이 확충되고 경제적인 측면이 대폭 삭제되었던 것이다. 즉 사회경제적 변화와 외교관계에서의 실리라고 하는 측면이 작용하면서 전국지리지의 내용과 성격이 변화하였던 것이다.

16-17세기에는 각 군현 단위로 수령과 지역 사족이 협조하여 자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정리한 읍지가 널리 편찬되었다.⁵⁾ 이는 사림의 성장과 관련이 있었다. 16세기

1) 정두희, 「조선초기 지리지의 편찬(I), (II)」 『역사학보』 69, 70, 1976.
이태진, 「『동국여지승람』 편찬의 역사적 성격」 『진단학보』 46·47합, 1979.
이성무, 「한국의 관찬지리지」 『규장각』 6, 1982.
서인원, 「朝鮮初期 地理志 研究 - 東國輿地勝覽을 중심으로-」, 해안, 2002

2) 양보경, 「조선중기 사찬읍지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81, 1998.

3) 이태진, 위의 논문, 257쪽.

4) 양보경, 「16-17세기 읍지의 편찬 배경과 그 성격」 『지리학』 27, 1983, 52-53쪽.

5) 16-17세기에 간행된 읍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거론하였던 양보경의 논문 이외에 대표적인 성과만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임세권, 「영가지 편찬 및 간행의 의의」 『안동문화의 재인식』, 1986.
김경수, 「정구의 『함주지』 연구」 『민족문화의 제문제- 우강 권태원교수정년기념논총』, 1994.
김경수, 「『영성지』의 편찬과 그 성격」 『역사와 담론』 37, 2004.
최윤진, 「16, 17세기에 편찬된 경상도의 사찬읍지」 『전북사학』 17, 1994.
우인수, 「1749년(영조 25) 울산 읍지 학생지의 편찬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117, 2002.
박홍갑, 「청도 사찬읍지 오산지(1673)의 편목과 특징」 『중앙사론』 21, 2005.
박인호, 「인동읍지 옥산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장서각』 22, 2009.
박인호, 「김천 읍지 『금릉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한국사학사학보』 30, 2014.

이후 몇 차례 사화를 거치면서 등장한 사림세력들은 그들이 이상으로 하는 이른바 도학정치를 지방 통치에 구현하기 위해서 당시 통치 질서 문란의 근간이 되고 있는 호구, 전결, 軍額, 貢賦 등에 대해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구체적 통치자료의 성격을 지닌 지리서에 대한 요망이 증대될 때 『동국여지승람』이 결여하고 있는 경제 관련 자료의 보완이 요청되었다.⁶⁾ 이와 더불어 16세기 이후 서울은 물론 지방에도 독서하는 양반계층이 확대되면서 전국의 문화 수준이 서울과 대등하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폐허화된 자기 지역의 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풍속,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이에 대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지역민의 자긍심과 문화의식을 고조시키려는 경향으로 이어졌다.⁷⁾

한편 이 시기 간행된 읍지는 찬자의 의도, 지역의 요구 등에 따라 편찬 목적이 다양하였다. 지방 통치 자료, 향촌 질서의 재편과 안정, 재지 세력의 현양, 군현의 역사지리서, 군사·방어의 강화와 대비, 교화의 수단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읍지가 편찬되었고, 그만큼 그 편제나 유형이 다양하였다. 그에 따라 각 지역마다 다른 특성의 읍지가 편찬되었다.⁸⁾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승평지』 역시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읍지 중 하나이다. 『승평지』는 이수광이 순천부사로 재직하던 1618년에 편찬되었다. 그 이후 3차례의 증보가 있었다. 오늘날 『승평지』라고 하면 이수광이 편찬한 1권과 3권의 속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수광이 편찬한 『승평지』만을 다루겠다.

이수광은 읍지편찬에 적극적이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승평지』 편찬 이전에 이미 홍주에서 『홍양지』를 편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읍지편찬에 대한 그의 관심은 李俊과의 친숙한 교분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⁹⁾ 때문에 『승평지』 역시 이 시기 간행되었던 다른 지역의 사찬읍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승평지』의 체제나 간행 목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읍지를 다루는 과정에서 간략히 언급되거나, 대략적인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¹⁰⁾ 이수광이 『승평지』를 간행한 목적은 『동국여지승람』의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는 한편,¹¹⁾ 지방관으로서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¹²⁾

박인호, 「성주 읍지 『경산지』의 파관과 그 정치적 함의」 『퇴계학과 유교문화』 58, 2016.

김경옥, 「『금릉읍지』의 편찬시기와 성격에 대한 검토」 『역사학연구』 52, 2013.

윤동원, 「선성읍지와 예안군읍지의 체제와 내용 분석」 『디지털도서관』 72, 2013.

김선경, 「조선 정부의 강진 파악: 『금릉읍지』를 중심으로」 『다산과 현대』 8, 2015.

이재두, 「1635년(인조 13) 현풍현감 김세렴의 『포산지』 편찬」 『퇴계학과 유교문화』 58, 2016.

6) 양보경, 1983, 앞의 논문, 53-54쪽.

7) 김경수, 2004, 앞의 논문, 99-100쪽.

8) 양보경, 1998, 앞의 논문, 71쪽.

9) 양보경, 1983, 앞의 논문, 56쪽.

10) 승평지에 대한 연구는 조원래, 「순천부사 이수광과 승평지」 『남도문화연구』 6, 1997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것이 유일하다.

11) 양보경, 1998, 앞의 논문, 65쪽.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승평지』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특히 『승평지』를 검토하면 임란 이후 순천지역의 향권을 새롭게 장악한 사족세력을 안배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승평지』를 편찬한 데는 당시 순천지역의 공론을 주도했던 사족세력의 의도도 개입되어 있다고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우선 『승평지』를 편찬했던 이수광의 의도와 그에 따른 『승평지』의 체제 및 내용을 살펴보겠다. 『승평지』 발문에 나오는 이수광의 편찬의도가 『승평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다루겠다. 이어서 『승평지』의 내용 중에서 순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부분과 순천지역 사족세력의 변화를 연관지어 살펴보겠다. 『승평지』에서는 『동국여지승람』에 산재해있던 시문들을 사실과 잡저의 편목으로 묶어놓았다. 그 중에서 순천지역 성리학을 진작시킨 인물로 평가받는 조위와 김굉필과 관련된 사적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편목 구성이 순천지역 사족세력 재편과 관련해 갖는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IV. 맺음말

1618년 순천부사 이수광이 편찬한 『승평지』는 이 시기 사찬읍지를 대표하는 것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 편찬 목적이나 내용 역시 당시 간행되었던 사찬읍지들과 유사하였다.

『승평지』는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하는 성격을 가졌다. 이수광은 순천과 관련해 유일한 읍지가 『동국여지승람』 뿐이고 그마저도 소략한 것이 남아있는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견문을 통해 보완하고, 그마저도 불충분하여 자신이 새로운 기록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동국여지승람』의 내용 중 잘못된 곳을 바로잡거나 『동국여지승람』 편찬 이후의 변화상을 현실에 즉해 정리하였다. 새로운 읍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순천 곳곳을 답사하였음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시로 남김으로써 부족한 기록을 대신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이수광은 『승평지』를 순천 부사의 행정을 돕기 위한 보조 자료로 간주하였다. 그는 순천 곳곳을 다니면서 현지 실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순천의 조세 부담액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정리하여 편찬함으로써 후임 수령과 순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 결과가 『승평지』 편찬이었다.

『승평지』 편찬은 임진왜란을 전후해 순천 향권을 새롭게 장악했던 세력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들 신흥 사족들은 김굉필 추모 사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순천 향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승평지』에서는 그들의 학문연원이 김굉필과 연결됨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다양한 성리학 신흥 사업에 대해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순천 사족들은 이수광의 『승평지』 편찬에 적극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2) 조원래, 앞의 논문, 271쪽.

일제 하 지방사 편찬에 나타난 지방 '통사'의 서술

- 『全州府史』(1942) · 『大邱府史』(1943)를 중심으로 -

정상우(한림대)

1. 문제의 제기 - 일제 하 '지방사' 편찬을 사학사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 지방사 편찬의 전통

; 조선왕조 건국 이래의 것. 중앙에서 지방 통치를 위해 또는 지방 사회 지배층들이 서로 연대하고 자신들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관찬·사찬의 지리지·읍지 편찬. 지방사 편찬은 일제 하는 물론 지금까지도,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市史', '○○道史' 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조선시대 邑誌類 간행의 전통을 잇는 것으로 평가됨.

- 일제 하 지방사 편찬

; 地方廳이나 居留民團 등의 在朝鮮 일본인들에 의해 혹은 향촌의 재지 세력 등에 의한 地方誌 편찬이 꾸준히 진행. 시간적 위치상 전통 시대와 현대의 지방사 편찬 사이의 가교.

;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배와 저항'이라는 구도 속에서 평가됨. 즉 당시 일본인이나 식민권력에 의한 지방사 편찬은 일본의 조선 통치에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자본 수탈 등을 위한 자료수집의 방편이었으며, 지방 사회를 발전시킨 재조일본인, 식민통치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 반면 지방의 유림들이 편찬한 地誌는 일제의 통치에 대항하여 민족 보존의 입장에서 행해진 소극적 저항이라는 것.

(당시 사학에 대한 평가구도 ('식민사학' / '민족사학')의 재현)

↔ 이러한 평가들은 일견 타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

1) 식민지기는 외세의 침략과 지배가 이루어지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근대적 학문이 제도화되던 시기. 근대 역사학의 제도화와 확산이 이루어짐. 이는 역사 편찬과 서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으며, 지방사 편찬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2) 중앙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지방이 가능한가? 중앙집권의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 지방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에 의존하는 상대적인 것. 그렇다면 일제 하 지방사 편찬을 고려할 경우(특히 그것이 관찬지방사라면) 당시 중앙의 역사편찬사업(조선사편수회의 『朝鮮史』)을 함께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특히 조선사편수회의 『朝鮮史』는 특정 歷史像을 제시하는 역사서술이 아닌 사료집·색인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어렵다. 만약 지방사 편찬과 『朝鮮史』의 상관성이 보인다면 오히려 지방사 편찬을 통해 당시 중앙의 역사편찬인 『朝鮮史』의 성격을 유추해낼 수도 있을 것.

- 왜 『全州府史』와 『大邱府史』인가.

; 개항 이후 급성장한 도시가 아님. 개항 이후 도시화가 이루어진 곳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과 관련이 적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이른바 ‘전통 도시’로 각각 식민지배 말기라 할 수 있는 1942년과 1943년에 府廳이 주도하여 府史를 간행. 즉 일제 하 간행된 지방사의 최종적인 모습이라 할만한 것.

; 이 시기는 총독부에서 주도한 각종 조사사업, 특히 조선사편수회의 『朝鮮史』가 편찬된 이후로 중앙사와 지방사의 관계 역시 살펴볼 수 있음.

4. 결론

▷ 1930년대 이래 지방 혹은 향토에 대한 애착, 애향심의 배양이 경제공황, 전쟁 등으로 인한 식민통치체제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 이러한 분위기에서 관찬 지방사들이 속출.

▷ 이번 발표에서 살펴 본 『全州府史』와 『大邱府史』 역시 이러한 맥락에 위치한 것. 이들은 이른바 ‘식민사학’의 전개 과정을 반영하여 내용상 고대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조선시대 해당 부분이 두 축을 이룸.

▷ 해당 지방의 역사는 일본과의 관련 속에서 서술되는 경향이 강함. 특히 전주와 같이 ‘조선왕실의 관향’, ‘풍패의 땅’과 같은 조선시대 이래 강고한 지역적 정체성이 없던 대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명징하게 드러남.

이렇게 한일관계 속에서 지방의 역사적 특성이 서술될 경우 일본이라는 존재가 없을 경우 그 지방의 역사적 특성 역시 사라지게 됨. 그렇다면 이는 그 지방이 조선의 지방이 아닌 제국의 지방으로 위치지어졌음을 의미.

▷ 이렇게 설정된 해당 지방의 위상은 전문 역사가들에 의한 서술, 바로 다양한 사료의 활용에 의해서 보증됨. 즉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꼼꼼한 사료의 활용을 통해 지방의 역사를 한일관계사의 맥락으로 끌어 들이고, 제국의 지방으로 위치짓는 것.

▷ 여기서 이용된 사료들은 조선사편수회에서 『朝鮮史』 편찬을 위해 수집·정리·발간한 사료들. 즉 조선사편수회와 『朝鮮史』로 대변되는 중앙의 역사편찬사업은 『全州府史』나 『大邱府史』와 같은 지방사의 ‘실증성’을 보장하는 아카이브로서 작동.

▷ 한편 실증된 지방사의 생명력은 해방 후에도 지속. 해방 이후 1960년대 발표된 대구의 약령시에 대한 역사적 고찰, 또 비슷한 시기에 전주시에서 발간한 전주시사에서 『大邱府史』나 『全州府史』나 에서 이야기 한 것과 동일한 내용, 체제들이 발견됨.

해방 후 분단과 전쟁과 같은 혼란 속에서 지방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자료의 발굴과 지방사에 대한 연구가 희박한 가운데 『全州府史』나 『大邱府史』와 같은 책들이 그나마 사료를 제시하며, 이른바 ‘실증’에 근거한,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해당 지방의 통사이자 연구서였음. 때문에 『全州府史』나 『大邱府史』의 내용은 해방 이후까지도 영속하는 생명력을 획득했던 것.

청말 호남성의 교경서원(校經書院)

이영란(조선대)

머리말
I. 청대 서원의 유형
II. 관학이상의 역할을 한 호남성 서원
III. 전통서원의 맥을 이은 교경서원
맺음말

머리말

서원은 본래 개인의 독서 기능과 서적을 보관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교육기관이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의 서원은 학과 형성으로 전국 곳곳에 보급되면서 서원이 갖는 의미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입신양명의 출세를 멀리하고 향촌으로 내려와 성리학 탐구를 하기 위한 성리학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던 것이다. 서원의 교육에 관하여 주자의 「백록동계시(白鹿洞揭示)」에서 기술하였듯이 선현을 본받아 자신을 도덕적으로 완성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독서, 치학(治學), 제사, 장서의 기능을 가진 전통서원이 점차 사설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서원으로 변화하였다.

중국에서의 서원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원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으며, 1990년대 서원 교육관련 논문이 다수 있고 그 이외에 학술, 학과, 장서, 경제, 건축 등등의 문제가 고르게 연구되고 있다.¹⁾

중국 근대교육으로의 개혁은 일반적으로 서세동점과 맞물려 서양교육의 영향으로 해석되어진다. 그러나 중국 서원이 학당이라는 이름으로 개혁하기 이전 이미 서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원 고유의 특징을 살려 교육을 하고자 하였던 서원들이 나타난다. 서양과의 접촉이 용이한 강소성이나 광둥성과는 달리 지리적 위치가 내륙에 있어 서양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근대 개혁 인재의 배출이 많았던 호남성에서는 꾸준히 서원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였다.

중국 서원은 한국 서원과 달리 근대시기에 학당이라는 이름으로 변모하면서 그 전통을 꾸준히 이어왔다. 단순히 서양 교육제도의 도입만을 부각하는 것은 중국의 근대

1) 박종배, 「중국 서원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교육사학』 제30권 제2호 (2008), 189-212쪽.

성에 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중국 지식인은 전통 서원의 교육적 특징을 교육체제로 정립하여 서원의 교육을 부활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특성을 잘 말해주는 서원이 바로 호남성의 교경서원이다. 교경서원에 관한 연구는 이미 유기(劉琪), 주한민(朱漢民)이 「校經書院述評」에서 교경서원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호남대학에서 호남성의 서원연구에서 교경서원의 역사와 제도, 학생 등에 대한 논문들이 있다.²⁾ 다만 교경서원이 호남성에서 전통서원의 맥을 어떻게 계승하였고 또한 중국 근대교육의 정체성과의 연계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호남성 교경서원이 전통서원 교육의 특성을 살려 근대교육으로의 가교역할을 하였던 서원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청대 서원은 어떤 특성을 가지며 어떤 유형의 서원이 존재하는지 정리해 보겠다. 그 다음으로 호남성의 지방지 『장사부지(長沙府志)』에서 기록된 교경서원의 설립 지역과 무관하지 않으면서 호남성의 대표 서원인 악록서원과 성남서원을 통해 호남성 서원의 특징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중국 전통서원의 특징과 관련하여 교경서원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여, 학당 교육으로 변화하기 전 서원 자체 안에서의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던 서원교육에서 중국 근대교육의 프레임을 찾고자 한다.

맺음말

청말 서세동점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지방을 다스리는 관직자나 교육을 하는 지식인 모두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체제를 정립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세워진 교육기관이 교경서원이고 이 서원은 전통서원의 강학과 도덕적 교육 그리고 나아가 실용적 학문을 통해 스스로 개혁을 시도하였다.

호남성 장사부의 악록서원과 성남서원은 중국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과거제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호남성은 전통 서원의 특성을 살리고 또한 나아가 중국 근대화에 맞는 교육을 위한 서원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서양의 여러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여겼던 호남성의 순무와 학정은 호남성의 전통서원의 맥을 이어 강학과 학술연구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교경서원은 서양의 교육제도가 도입하기 이전의 중국 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중국적 교육제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교경서원에서는 호남성의 호상학적 전통에 근거한 경세치용적 학풍을 최대한 활용하여 완만하지만 근대적 인물 배출을 위한 교육

2) 劉琪, 朱漢民, 「校經書院述評」 『嶽麓書院一天零一十周年紀念文集』 제1집 (湖南人民出版社, 1986); 周秋光, 莫志斌 編, 『湖南教育史』 제2권 (嶽麓書社, 2002); 張雪梅, 「湖南學政江標與校經書院藏書樓」, 『圖書館』 (2009); 馬友斌, 「校經書院研究」, 湖南大學 (2011).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교경서원은 청대 서원이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기관으로서가 아닌 전통서원이 인재양성을 위해 자유강학과 학술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건축 설립은 물론 도서관과 재정적인 자립도 하였다.

전통 서원의 중요한 역할은 강학 활동에 참여하고 학술 연구를 토대로 학회를 운영하고 학회지를 간행하여 중국적 교육의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戰後 上海의 韓僑 처리와 韓人사회

김승욱(충북대)

1. 前史: 終戰 이전 上海 韓人사회의 추이

임시정부의 소재지였던 상해는 한국인에게 한중 간 우의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역사적으로 이 도시와 그만큼 긴밀한 연관을 맺어왔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우선 이 도시를 경험했던 한인의 비율은 높은 편이 아니다. 유출과 유입 요인 두 측면에서 한인이 이 도시로 이동할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했다. 한반도가 식민지가 된 이래 고국을 떠나는 한인의 수는 유례없이 많았고¹⁾ 주변 국가, 지역의 도시 가운데 상해는 그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았으며 한반도와의 연결해주는 운송 네트워크도 비교적 일찍부터 구축되어 있었다.²⁾ 그러나 상해로 이주해온 여러 외국 교민 가운데 한인이 점했던 비중은 주변 국가는 물론이고 먼 서구 국가의 그것에 비해서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던 시기가 많았다.³⁾ 또한 긴밀한 연관의 결과로 당연히 쌓여 있어야 할 이 도시에 관한 역사적 지식, 정보가 우리 사회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한중 수교 이후 그나마 이 도시에 대해 상당히 파악하게 되었지만, 학문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깊이 있는 관련 자료, 연구들이 정작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요컨대 한국인의 이 도시와의 역사적 연관성은 그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멀다.

[중략]

4. 맺음말: 戰時 韓人사회의 陰影

상해 한인의 전후 경험은 일인의 그것과 매우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중국

1) 1945년 “광복”을 맞았을 때 한반도 바깥의 한인 인구는 대략 400만명 정도에 달했다. 지역적으로 일본에 210만명, 중국 전역에 170만명, 소련에 20만명, 미국 및 기타 지역에 3만명 등이 분포했다. 조선총독부의 통계에 의하면 1944년 말 외국인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인구가 2512만명 정도였으니, 戰前 재외 한인의 수는 한반도 총 인구의 1/6에 해당했다. 김광렬, 『한인의 일본 이주사 연구 1910~1940』, 논형, 2010, p.14 1945년 종전 직전 상해의 한인 인구는 8천명 정도였다.

2) 줄고, 「19세기 말~20세기 초 仁川의 운송망과 華僑 거류양상의 변화」, 『중국근현대사연구』 제50집, 2011.6., pp.77-87

3) 줄고, 「20세기 초반 韓人의 上海 인식 -공간 인식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54집, 2012.6., pp.123-129

이 자국 포로와 교민에 대해 善待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그에 감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같은 시공간에서 한인이 겪었던 경험은 극심한 고난의 기억으로 남았다. 항일을 함께 해온 "兄弟之邦"의 국민이 적성국 국민의 그것보다 저열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은 분명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관해 기존 연구에서는 국민정부 중앙의 정책과 지역 군정 당국의 정책 실행 간의 편차를 주로 지적해왔다. 이는 당시의 인식이기도 한데, 임시정부는 국민정부에 대해 줄곧 蔣介石이 한인을 우대하겠다고 한 “諾言”을 각 지역 군정당국이 그대로 시행하지 문제를 따져 물었다. 馬長林은 이것이 “국민당 중앙과 국민정부의 한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지 정책이 아직 전체 정부 계통의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명확한 정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설명한다.⁴⁾

그러나 중앙-지방의 정책, 실행의 편차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지방 당국이 중앙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한인에 대해 각박한 조치를 취했다면 왜 일본에 대해서는 "以德報怨"의 입장을 충실히 따랐는지 집행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馬軍은 전후 국민정부와 지방 당국이 처리할 여러 사안 가운데 外僑의 송환은 일부였을 뿐이며 한인 처리는 그 가운데서도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고 지적한다. 반면 중일 문제는 중한 문제에 비해서 중국의 대외 관계와 국가 안보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다고 지적한다.⁵⁾

전후 중국의 외교 정책 전체에서 한교 처리 문제가 접하는 비중이 낮았으며, 그에 비해 일교 처리는 중국의 외교, 안보의 중요 처리 항목으로 취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민정부는 미국과의 협조 체제 하에서 일인 포로와 일교에 대해 관용 정책을 취하고 체계적으로 집중관리, 송환을 진행했다. 이는 국민정부가 냉전구도의 전략적 거점으로 일본을 중시하는 미국이 주도한 국제 정치의 기초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송호회전, 남경대학살 등의 사태를 거쳐 일본 점령 기간의 심각한 착취를 겪었던 중국사회의 정서를 반영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일본 점령 시기 많은 한인들은 일본인을 도와 중국인을 편취, 약탈하고 마약 판매, 위안소 운영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한인에 대한 인식은 “小東洋”, “二鬼子” 등처럼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또한 전후 국민정부 내의 보편적인 부패 현상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세 집단인 한교는 그들 “劫收”의 중요 대상이 되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요인들이 중국인의 원한이 “二鬼子”에만 집중되고 “大鬼子”에 대해서는 절제되었던 사실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국민정부의 外僑 정책은 전후 국제 정치의 새로운 맥락 위에 놓여 있었으며, 그 가운데서 한교 정책은 일교 정책이 중시되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작은 항목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전후 상해의 한교 처리 과정에서 한인이 겪었던 경험에는, 두 방향에서 戰

4) 馬長林, 전제 논문, pp.242~253

5) 馬軍, 單冠初, 전제 논문, p.69

時 한인사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는 한인사회의 분리 구도가 전후 처리 과정에서 정리되지 못한 채로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전후 중국인의 한인에 대한 공격 행위는 국민정부 등의 부패 등의 요인이 개입되어 있었지만, 전시 친일 한인의 행적이 근본적인 요인으로 그에 대한 보복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국민정부에 한인의 “良莠”를 가려서 韓奸을 처벌하고 선량한 한인을 우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친일, 반일 한인을 막론하고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오히려 당시 서병호의 언급처럼 “불량분자들은 벌써 본국으로 송환”되고 남은 교민들이 피해를 입은 측면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전시 한인사회의 청산과 통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전후 냉전 체제의 구도 속에서 기존의 일본 중심의 지역세계 구도가 온존하게 되었다. 국민정부의 한교와 일교 처리가 각기 다른 비중을 갖게 된 데는, 당시 형성되어가던 미국 중심의 냉전 구도가 있으며 그 속에서 일본은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을 유지했다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일본 중심적 지역 구도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일정 잔존했다. 이 점에서 전후 상해 한인의 경험은 전후 한국사회가 겪어야 했던 냉전시 기 구도의 성격을 미리 압축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의 지방 지식과 제국주의 담론

-에미 스이인의 『실지탐험 포경선』 분석-

허영란(울산대)

1. 연구 계기

한말의 한국 사회를 묘사한 외국인의 기록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양적으로 많다. 그들 ‘타자’의 서술이 오리엔탈리즘에 오염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미 서구 모델의 근대와 근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이 채택하고 있는 시선에 대해 친화성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에게 개항을 전후한 근대 이전의 과거는 서구 사회보다 오히려 더 낡은 미지의 세계이다. 그래서 별 주저 없이 해당 텍스트를 ‘객관적 사실’의 기록으로 인용하기도 하고, 또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외국인 기록을 한국어로 번역 출판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더욱이 그들의 기록에는 정치 부문이나 지배층에 대한 것 외에, 각 지방의 풍습, 구체적인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조선 민중의 다양한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암묵적으로 구미인을 가리킨다. 그러나 조선에 대해 훨씬 많은 기록을 생산한 것은 일본인이다. 개인 단위는 물론이고 단체, 행정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구체적인 목적 하에 한말의 조선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비록 서구인 기록만큼 활발하게 번역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자들에 의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서구인의 기록과 일본인의 기록, 양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개항 이전부터 조선 침략을 구상했던 일본에게 조선은 담론적 타자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조사 연구 대상이었다. 일본 측 기록들은 대체로 작성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며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서구인의 기록과 비교하며 개인의 에세이라는 성격이 약한 것이 특징인 것 같다. 그래서 비록 ‘개인’이 작성한 것조차도 ‘일본제국주의’의 (이념에 포획된) 기록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¹⁾

일제시기에 접어들면 일본인들의 기록은 지방 단위로도 대거 생산된다. 당시의 지방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 간행한 지방지는 본국의 일본인과 조선으로 건너온 이주자를 독자로 상정하고 있다. 재조

1) 사적 경험과 감상을 담은 근대적 개인의 기록도 당연히 이데올로기적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욱이 서구인들은 대부분 외교관, 선교사, 기자, 여행자 등 대표성을 가진 개인이었다. 그러나 ‘개체성’을 표방한 기록에 담겨있는 ‘주관성’이 역설적으로 기계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있는 ‘객관성’의 표지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것은 개별적인 ‘그/그녀’의 경험과 인식이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선 일본인들은 내륙으로 침투, 조선 각지에 정착했으며, 지배자의 시선으로 조선과 자신이 정착한 지방을 (그들 방식의 애향심을 갖고) 바라보았다. 그러한 지방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선의 권력을 해체하고 책의 서술을 거슬러 읽는 것이 필요하다. 식민지 통치 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각 지방이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지방지에는 그런 조건이 반영되어 있다. 각 지역마다 일본인 사회가 처해있는 조건이나 조선인 주민과의 역관계가 달랐다. 따라서 지방지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지역사를 재구성하기에 앞서 지방지의 간행 현황 자체를 비교하고 간행 환경과 조건, 목적 등을 비판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²⁾

[중략]

6. 덧붙이는 말

에미 스이인에게 울산이라는 지역은 加藤清正의 籠城戰, 동양어업주식회사의 포경기지, 그리고 미개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로 요약된다. 여기에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자연풍경을 덧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장생포, 대화강, 울산본부의 관아건물, 누각, 월봉사 등 지역을 특징하는 지명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은 울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의 포경산업이 진출해 있는 ‘조선’에 대한 기록이다.

울산 지역사의 측면에서 이 기록은 초기 포경산업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일본인에 의한, 일본의 포경산업이다. 장생포의 주민 가운데는 고래고기를 운반하는 익명의 최말단 일꾼, 고래뼈에 붙은 고기를 떼어먹기 위해 벌레처럼 달라붙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촌장과 통역이 등장할 뿐이다. 그것들은 이어지는 일제시기와 해방 이후의 역사와 버무려져서 한국의 대표적인 포경항 장생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울산 지역사와 제국주의 포경산업의 조우는 아직 매우 어색하다.

2) 허영란, 「재조선 일본인이 재현하는 ‘지방’-일제시기 지방지 편찬을 중심으로-」 『지역과역사』 34, 2014, 40~63쪽.

일본 전후사학과 『오키나와현사(沖繩県史)』·『나하시사(那覇市史)』

편찬의 역설: 국민사에서 탈국민사로

김민환(한신대)

1. 들어가며

일본 오키나와현의 『오키나와현사(沖繩県史)』는 1965년부터 간행되기 시작하여 1977년에 별권(別卷) 포함 모두 24권의 간행으로 그 긴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1963년부터 발간 준비가 시작되었으니 장장 14년의 기간이 걸린 것이다.¹⁾ 24권으로 된 오키나와현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第1卷 通史,

第2卷 各論編 1 政治, 第3卷 各論編 2 經濟, 第4卷 各論編 3 教育, 第5卷 各論編 4 文化 1, 第6卷 各論編 5 文化 2, 第7卷 各論編 6 移民,

第8卷 各論編 7 沖繩戰通史, 第9卷 各論編 8 沖繩戰記錄 1, 第10卷 各論編 9 沖繩戰記錄 2,

第11卷 資料編 1 上杉県令關係日誌, 第12卷 資料編 2 沖繩県關係各省公文書 1,

第13卷 資料編 3 沖繩県關係各省公文書 2, 第14卷 資料編 4 雜纂 1,

第15卷 資料編 5 雜纂 2, 第16卷 資料編 6 新聞集成, 第17卷 資料編 7 新聞集成,

第18卷 資料編 8 新聞集成, 第19卷 資料編 9 新聞集成, 第20卷 資料編 10 沖繩県統計集成,

第21卷 資料編 11 旧慣調査資料,

第22卷 各論編 10 民俗 1, 第23卷 各論編 11 民俗 2,

別卷

제1권에서 통사(通史)가 서술되었으며, 이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1, 문화 2, 이민 등이 각론으로 차례차례 서술되고 있다. 특히 제8권부터 제10권까지 오키나와전(戰)과 관련된 내용이 각론으로 서술되어 편찬되었다. 11권부터 21권까지는 자료를 정리해서 편찬했으며, 마

1) 1991년부터는 '신현사(新県史)' 편찬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1993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2037년에 전권 48권의 '신현사' 발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통사 1권, 각론 17권, 도설편(図説編) 5권, 자료편 25권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각론은 이전 현사에는 없었던 '자연환경', '문학' 등이 독립되어 있는 등 대폭 보강되고 있다. 다만, '신현사'는 현재 편찬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지막 22권과 23권은 다시 각론으로 돌아가 오키나와의 민속을 다루었다. 전체 편제에서 오키나와전과 관련된 내용이 전체에서 가장 많은 3권을 다루고 있다.

내용의 방대함과 함께 『오키나와현사(沖繩県史)』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사실 편찬 기간 동안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복귀’했다는 사실이다. 즉, 『오키나와현사』 편찬 준비를 시작한 1963년이나 제1권이 나온 1965년은 오키나와가 일본의 현(県) 중 하나가 아니라 일본의 ‘잠재주권(residual sovereignty)’만 인정되고 실질적인 통치는 미군에 의해 이루고 지고 있던 때였다. 당연히 『오키나와현사』의 편찬을 주관했던 것은 오키나와현청이나 그 산하 기관이 아니라 류큐정부(琉球政府)²⁾였다. 여기에 주목하면, 일본 중앙정부와는 무관한 류큐 정부가 이 시기 오키나와현사를 편찬한 것은 무척이나 이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키나와 현(沖繩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오키나와현사(県史)’가 먼저 존재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키나와현이 없는 상태에서 현사가 만들어진 이 기괴함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또, 현사가 편찬되는 과정에 오키나와현이 만들어진 것은 역으로 현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인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오키나와현사』 편찬 작업이 갖는 역설을 살펴 보았다. 일본사의 한 부분으로서 오키나와의 역사를 구성하고자 했던 『오키나와현사』 편찬의도가 실제 편찬 과정에서 일본과 오키나와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해 오키나와의 ‘독자성’을 분명하게 했다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이런 변화는 비단 역사서술이라는 학문적 영역에만 머문 것은 아니다. 그런 변화는 ‘심성’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가 「오키나와를 반환하라(沖繩を返せ)」라는 노래이다.³⁾ 이 노래는 오키나와의 ‘조국복귀운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대중적 운동가요였다. 이 노래는 1956년 전국사법부직원노동조합 후쿠오카 지부에서 작사를 했고, 아라키 사카에(荒木栄)⁴⁾가 작곡했는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2) 미군정은 오키나와의 통치를 위해 류큐열도미국군정부(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of the Ryukyu Islands/MG), 류큐열도미국민간정부(United States Civil Administration of the Ryukyu Islands-USCAR), 류큐임시중앙정부(Ryukyu Provisional Central Government, PCG), 류큐정부(Government of the Ryukyu Islands, GRI) 등 다양한 형태의 통치기구를 운영하였다. 이 기구들은 모두 일본의 중앙정부에 대해서 독립적인 기구들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은주(2008)을 참조할 것.

3) 이하의 부분은 김민환(2013)의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4) 원래 미쓰이 미이케탄광(三井三池炭鉱)의 기계조립공이었던 아라키 사카에는 전후 일본을 뒤흔 든 ‘미쓰이 미이케쟁의’에 참가하며 「열심히 하자(がんばろう)», 「이 승리 올려 퍼져라(この勝利ひびけとどろけ)», 「오키나와를 반환하라(沖繩を返せ)」 등 많은 노동가를 작곡한 우타고에운동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타고에운동은 1948년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 오고 있는 반핵과 평화를 추구하는 진보적인 음악운동이다. 우타고에운동에 대해서는 이지선(2001)을 참조할 것.

「오키나와를 반환하라」⁵⁾

단단한 땅을 깨고 민족의 분노로 타오르는 섬, 오키나와여
우리들과 선조들이 피땀으로 지키고 일군 오키나와여
우리는 외친다 오키나와여, 우리들의 것이다 오키나와는
오키나와를 반환하라, 오키나와를 반환하라

원래 이 노래의 가사는 명백하게 일본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 노래에서 오키나와는 ‘민족의 분노로 타오르는’, ‘우리들과 선조들이 피땀으로 지키고 일군 곳으로 소환되고 있다. 그 소환의 주체는 물론 ‘우리들’ 일본인이고, 이 일본인들의 요구가 향하는 곳은 미국이다. 오키나와는 당연히 일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은 오키나와를 일본으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노래가 일본본토에서 만들어져 일본본토에서 불린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가지만, 오키나와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불려 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복귀운동을 전개한 오키나와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들’ 일본인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복귀된 이후 이 노래의 의미는 극적으로 바뀐다. 이미 오키나와가 반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본토에서는 이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오키나와에서는 똑같은 가사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여전히 이 노래가 불려지게 된다. 즉, 오키나와가 이미 일본에 반환된 상태에서 오키나와 사람들만 여전히 이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에서 ‘오키나와를 반환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일본인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이며, 오키나와를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곳은, 미국이 아닌, 일본이다. 원래 일본의 민족적 정서가 강하게 투영된 이 노래는 이렇게 일본인과 구분되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정체성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뜻이 변하게 되었다. 바로 이런 ‘정서’의 변화와 『오키나와현사』의 의미변화는 밀접하게 관련있는 것이다.

5) 이 노래의 가사는 도미야마 이치로(2002: 106-107)에 번역되어 있다.

로마제국 통치 하의 속주의 로마화와 엘리트층의 관계

김상엽(단국대)

- I. 서론
- II. 로마제국 속주의 로마화
- III. 속주의 로마화에서 엘리트층의 역할
- IV. 결론

I. 서론

로마화(Romanization)는 비로마적인 사회들이 로마 제국의 정치·사회구조로 합병되는 과정을 뜻하는 근대의 용어이다. 로마화라는 연구주제는 오랜 동안 로마사 연구자들을 사로잡아 왔다. 그중 독일의 로마 역사가인 테오도르 몸젠(Theodor Mommsen)은 로마의 정복지역들에 로마문화를 이식시키는 과정을 연구한 최초의 학자이다. 테오도르 몸젠에 따르면, 로마화는 로마 제국의 서방 속주 지역에 로마문화를 이식시키는 과정이고 우월한 위치의 선진적인 로마문화의 자연적인 흐름의 결과물이었다. 그는 서방 속주들의 로마화를 일방적인 과정으로 파악하여 정복당한 민족이 로마인의 생활방식을 완벽하게 모방했고 속주민들이 로마인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했다.¹⁾ 로마화에 관한 이와 같은 몸젠의 견해는 19세기 독일의 민족적인 동향에 근거했다. 이러한 견해는 브리타니아(Britannia)의 로마화를 연구한 프란시스 허버필드(Francis Haverfield)에 의해 재조명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허버필드는 로마령 브리타니아와 로마령 갈리아의 문화적 차이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로마 제국과 예속 국가의 문화적 상호작용은 갈리아, 히스파니아, 아프리카, 동방 지역 속주들 등에서처럼 브리타니아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²⁾ 이 연구를 통해 속주들이 로마문화를 어떻게 차용시켰는가에서 나타난 지역적인 차이는 로마 제국과 예속 국가에서 발생한 문화적 동화과정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출발을 표출시켰다.³⁾ 또한 미하일 로스토프체프는 로마화를 지배적인 국가에 의해 제외된 고품격의 생

1) T. Mommsen, *Römische Geschichte*, V.5, (Berlin, 1885 reprinted 1929), pp. 1-6; pp. 225-227.

2) F. Haverfield, *The Romanization of Roman Britain*, (London, 1923), p. 12: 로마령 브리타니아의 연구를 통해 허버필드는 당대의 영국의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정당화시키고자 함.

활방식의 수용을 통한 결과물, 즉 로마 문화에 관한 속주민들의 차용을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것으로 파악했다.⁴⁾ 이처럼 몸젠, 허버필드, 로스토프체프 등은 로마화를 서방 지역 속주민들의 속주민들이 그들의 문화양식들을 포기한 문화적 동화과정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견해는 영국의 역사가인 콜링우드(R. G. Collingwood)에 의해 반박되었다. 로마령 브리타니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는 로마화를 속주민의 문화차용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문시했고 로마화를 로마 사회와 속주 사회의 문화혼용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했다.⁵⁾ 이러한 견해를 발전시켜 오스트리아의 로마 역사가인 스보보다(M. E. Swoboda)는 로마화를 문화적 동화과정이라 문화변용의 과정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즉, 그는 로마화를 로마의 정치구조와 행정의 토착사회체들의 지역 엘리트 집단에 의해 차용된 문화변형으로 이해했다.⁶⁾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도 허버필드는 로마화를 로마문화와 토착문화의 문화적 상호작용의 점진적인 과정으로 정의 내렸다. 이를 통해 속주민은 로마인의 생활방식, 규범, 정치·경제적 관습들, 물질문화 등을 차용했다.⁷⁾ 허버필드에 따르면, 로마화는 행동양식의 문제였다. 그래서 속주민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로마인들과 로마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행동양식의 문제로서 로마화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러한 견해를 계승한 학자는 중부 이탈리아 지역의 로마화를 연구한 헤리스(W. Harris)인데 그는 이 연구를 통해 로마화를 속주 지역민들이 로마인들로 여겨지는 과정으로 이해했다.⁸⁾

로마인들은 속주지역들의 평화와 질서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켰고 지역 엘리트층을 유인하여 로마인의 생활방식들을 융합시키고자 한 반면 속주민들은 지역에 따라 로마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고유한 동인들을 표출시켰다. 동방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서방 지역에서도 속주민의 엘리트층은 그들의 공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로마 시민권을 수령했고 법적·경제적 특권들을 획득했다. 로마 시민권은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차별성을 일소했고 정복당한 민족들의 엘리트층은 로마 제국의 엘리트층이 되어갔다. 이러한 측면에서 로마 제국 통치하의 속주 지역의 엘리트층과 문화변용 과정으로서의 로마화의 관계는 중요한 연구과제이고 로마 제국과 속주지역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논제이다. 따라서 논자는 이러한 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먼저 로마제국 속주의 로마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들을 분석할 것이고 다음으로 속주의 로마화에서 엘리트층의 역할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3) C. R. Whittaker, *Frontiers of the Roman Empire*, (London, 1994).

4) M. Rostovtzeff,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Roman Empire*, (Oxford, 1957), pp. 131-149, p.1020; M. Rostovtzeff, *Rome*, (Oxford, 1927), p. 215.

5) R. G. Collingwood, *Roman Britain*, (Oxford, 1934), pp. 91-92.

6) M. E. Swoboda, "Zur Frage der Romanisierung," in *Anzeiger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hilosophisch-Historische Klasse* 100(1963), pp. 159-160.

7) F. Haverfield, *The Romanization of Roman Britain*, (London, 1923), p. 22.

8) W. Harris, *Rome in Etruria and Umbria*, (Oxford, 1971), p. 147.

IV. 결론

로마제국은 속주지역의 평화와 질서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켰고 속주지역 엘리트층을 유인하여 로마인의 생활방식을 융합시키고자 한 반면 속주지역 엘리트층은 지역에 따라 로마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고유한 동인들을 표출시켰다. 동방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서방 지역에서 속주지역 엘리트층은 그들의 공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로마시민권을 수령했고 법적·경제적 특권들을 획득했다. 로마시민권은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차별성을 일소했고 정복당한 민족의 엘리트층은 로마제국의 엘리트층이 되어갔다.

독일 전후 바덴-뷔르텐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Land) 형성을 통해 본 지역통합

김건우(경북대)

I. 머리말

현재 독일(BRD: Bundes Republik Deutschland)은 모두 16개 주(Land)로 구성된 연방 공화국이다. 즉 각기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16개의 주(Land)가 공통된 정치 이념아래 연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16개 주 가운데 바덴-뷔르텐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도(州都, Landeshauptstadt)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장으로 유명한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이다. 주 전체 면적으로 본다면 니더작센(Niedersachsen)과 바이에른(Bayern) 주에 이어 독일 주 가운데 3번째로 넓으면서, 동시에 인구면에서

서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와 바이에른(Bayern) 주 다음으로 많다.¹⁾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과거 바덴공국과 뷔르텐베르크공국으로 서로 다른 국가였다가 2차 대전이 끝난 후 각각 프랑스와 미국의 점령지 시대에 남바덴(Südbaden), 뷔르텐베르크-바덴(Württemberg-Baden), 뷔르텐베르크-호헨츨러른(Württemberg-Hohenzollern)로 분할되어 각각 서로 분리되어 독일연방에 가입한 후, 1952년 국민투표를 통해 마침내 하나의 주로 통일되었다. 독일 연방소속 16개 가운데 투표를 통해 탄생한 유일한 주이며, 동시에 전후 새로운 지역통합의 좋은 본보기로 현재까지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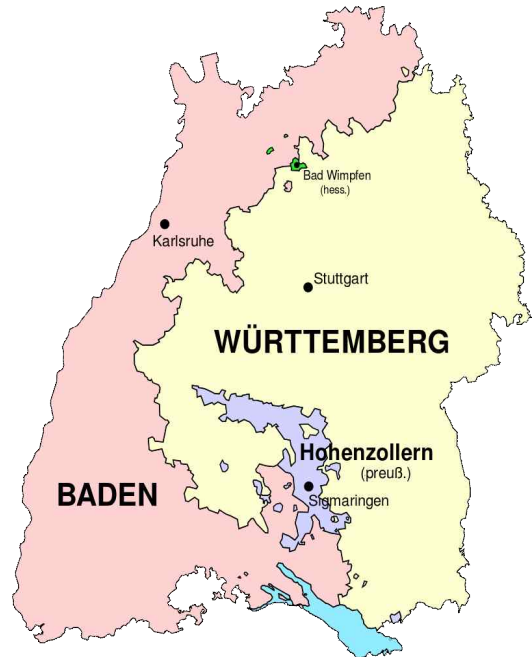


그림 1 1945년 이전 독일 남서부지역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먼저 연방소속의 새로운 주 탄생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1) 독일연방통계청(Destatis: Das Statistisches Bundesamt)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인구는 10,716,644명이고, 면적은 35,751km²이다. 참고로 16개 주 가운데 인구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가 17,638,098 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바이에른 주에 12,691,568명이 살고 있다.

를 알아내고, 이와 함께 국민투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선 인물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론들 가운데 새로운 주의 탄생에 반대를 했던 주민들의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해서 집중해 보고자 한다.

III. 맺음말

16개의 주로 구성된 독일연방공화국은 과거 신성로마제국 이후 오랫동안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굴곡의 역사를 극복하고 현재 독일은 패전국의 명에었던 분단을 넘어 마침내 통일을 이루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 과정 속에서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옛 동독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소련의 변화가 가장 큰 통일의 배경이었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최종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한 통합의 노력과 결과라는 출발선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2차 대전 직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점령지의 3개의 국가가 서로 합의 하에 국민투표를 통해 하나로 통합하게 된다. 비록 그들이 원하는 거창한 통일은 아니었지만 서로 다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온 주가 주민들의 합의와 노력에 의해 마침내 하나의 주로 다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독일 국민들 마음속에는 과거 어두웠던 역사의 터널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기 위해 단결과 통합에 무엇보다 다양한 공을 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독일인들의 모습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통합 과정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5개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지방지 편찬과 지방 역사

■ 주 최 : 호남사학회, 대구사학회, 도시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호서사학회


■ 주 관 : 목포시사편찬위원회 · 목포대학교 사학과

■ 후 원 : 목포시 · 한국연구재단 · 목포대학교

■ 인 쇄 : 2016년 6월 8일

■ 발 행 : 2016년 6월 10일

※ 이 자료집의 무단전재나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98조에 위배됩니다.



목포시사 편찬을 위한 5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지방지 편찬과 지방 역사

이 발표 논문집은 2016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